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26~'30]

2026. 03.



산업통상부

목 차

I . 추진배경	1
II . 국내외 정책환경	2
① 글로벌 동향	2
② 국내 동향	5
III . '21~'25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평가 ..	7
① 그간의 성과	7
② 한계	9
IV . 비전 및 정책목표	10
V . 전략과제	11
①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11
② 국제표준화 및 규범화 대응 역량 강화	15
③ 자율적인 지속가능경영 기반 마련	17
VI . 기대효과	20
VII . 향후 추진계획	21

I. 추진 배경

◇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핵심전략**

* 경제적 수익성뿐 아니라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려하는 경영방식

□ 기후위기, 인권·노동 이슈 등 복합적 환경 변화는 기업에게 ‘이윤 중심 경영’에서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 경영’으로의 전환을 요구

○ 즉, ESG 요소가 기업 생존과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 의제**로 부상

□ 글로벌 공시기준 **확산***으로 투명한 ESG 정보공개 요구 증대

* EU를 시작으로, 일본·호주 등 주요국은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추진

○ **투자의사결정¹⁾**, 대기업 **공급망 편입²⁾**에도 ESG 영향력은 확대

1) 환경파괴, 인권침해 기업 등 투자배제, 2) 납품기업에 ESG 준수 요구 및 실사

◇ 산업정책 차원에서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수립·이행 중

□ 정부는 기업의 자율적 지속가능경영 지원 근거(산업발전법)를 마련

○ '21년부터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21~'25)**을 통해 ESG 확산

<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21~'25) 주요 내용 >

▲ 산업 전반의 지속가능경영 제고를 위한 **K-ESG 가이드라인 개발**

* ('21)공통 가이드라인 → ('22)공급망 대응용 가이드라인 → ('23~)업종별 가이드라인

▲ 'ESG 산업 네트워크' 구성(총 42회), 찾아가는 ESG 교육('21~'25 956개사), 공급망 실사 지침 대비 컨설팅('23~, 1,500개사) 등 **업종별 ESG 역량제고**

▲ 지속가능경영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업종별 지속가능경영 **파트너십 구축** 등

□ 대기업은 글로벌 공급망 실사·공시 규범화 등에 적극 대응 중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필요성은 인식하나 대응역량·경험이 부족

⇒ ESG를 규제 대응이 아닌 **산업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전환하고, 중소·중견기업이 ESG 혁신주체로 성장토록 지원체계 강화 필요

II. 국내외 정책환경

1 글로벌 동향

① (규모) 글로벌 ESG 정책 불확실성 확대에도 많은 국가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 등 ESG 관련 제도 수립 중

○ (ISSB) '23.6월 ESG 공시기준 발표, 각 국가 및 기업이 기준을 준수하거나 여건에 맞게 수정 적용 가능토록 자율성 부여

* IFRS(국제회계기준) 산하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

○ (EU) '23.1월 지속가능성공시지침(CSRD)에 따라 의무공시를 도입하고, '24.7월 기업 공급망 내 환경·인권 실사 지침(CSDDD) 마련

－ '25.12월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개정안*이 최종 승인(EU의회)되었으며, '25년부터 일부 EU 대기업(임직원 1,000↑)의 의무공시는 시작

* 例) 적용대상 : (당초)순매출 5천만€ → (최종)순매출 4.5억만€ 초과

○ (미국) '24.3월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기후공시 규칙을 발표했으나 기업 소송으로 도입 보류 →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중단('25.3월)

※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성향의 주정부를 중심으로 기후공시법 제정(또는 제정 예정)

○ (기타) 일본은 '25.3월 공시기준을 발표하고 '27년부터 단계적 시행, 싱가포르·호주 등은 올해부터 단계적 시행

【 주요국 공시제도 추진동향 】

구분	공시기준 마련	보고연도				
		'25	'26	'27	'28	'29
 EU	'23.7	EU대기업	-	-	非EU기업	역외기업
 미국	'24.3	- 중단 -				
 일본	'25.3	-	-	3조엔↑	1조엔↑	-
 중국	'25.4 ^{초안}	-	-	-	-	-
 싱가포르	'24.9	-	주요 상장기업	-	-	-
 호주	'24.9	-	대기업 등	-	-	-

② (경영) 일부 ‘Greenhushing*’에도 대기업 중심 ESG 경영 보편화

*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거나, 축소 발표하는 행위

○ 美S&P500, EUSTOXX50 기업 90% 이상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 ESG 위원회 설치, 최고 ESG 책임자(CSO) 임명 등 조직 내 ESG 내재화도 가속

○ 미국 일부 기업은 소송 리스크 등을 우려해 ESG 경영 공개 축소

* S&P500 기업의 실적 발표에서 ESG 언급 최근 3년 내 76% 감소(Bloomberg)

－ 그러나, 많은 기업은 여전히 지속가능경영 실천을 중요하게 인식

* 27개국, 2,100개 기업의 70%는 ‘기후변화가 기업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45%는 ‘지속가능성 문제 해결을 위해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 중(Deloitte)

③ (투자) 글로벌 ESG 투자*는 지속 증가

* ESG 성과 우수기업, 녹색기술 등 지속가능성 관련 특정 테마 등에 투자

○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투자규모는 '24년 16조 달러 수준

－ '20년 3.3조 달러에서 '24년 16.8조 달러까지 증가 추세

○ 글로벌 ESG 채권 규모는 지속 성장하여 약 5조 달러 도달('25.12)

－ 이 중 녹색채권이 2.9조 달러(56.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우리나라는 '25.4분기 기준 세계 8위(녹색 14위·사회적 3위·지속가능채권 6위)



※ 한국거래소(Morningstar, GSIA 재가공)



※ Bloomberg

【참고】 주요 글로벌 ESG 규범(EU 중심)



* 2025 ESG법제(한국법제연구원, 2025.10) 참고

< EU의 ESG 관련 주요 정책 >

분야	규정(발효)	주요내용
공시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¹⁾ (CSRD)(‘23.1)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방법을 제공하여 투자자·소비자에게 보다 상세한 영향 정보를 제공
실사	공급망실사지침 (CSDDD)(‘24.7)	대상기업의 자체 활동, 활동 사슬 내 협력업체 활동에 대한 부정적 환경,인권 영향 실사를 의무화
	산림전용방지규정 (EUDR)(‘23.6)	산림 전용을 방지(산림전용을 통해 생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생물 다양성을 보호
	핵심원자재법 (CRMA)(‘24.5)	전략(16종), 핵심(34종) 원자재에 대해 역내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
제품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23.5)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배출량에 근거하여 수출품의 탄소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
	에코디자인규정 (ESPR)(‘24.7)	모든 물리적 상품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성 외에 재활용 비중 등 요구, 디지털 여권(DPP) 도입 등

1) 지침(Directive) : 전반적인 목표와 제정 시한만을 제시하고, 각 회원국에서 별도의 구체적인 국내법 제정

2) CSRD :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3) CSDDD :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4) EUDR : European Union Deforestation-Free Products Regulation

5) CRMA : Critical Raw Materials Act

6) CBAM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7) ESPR :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2

국내 동향

① (규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기준 및 로드맵 마련 중(국정과제)

- '22년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설립 이후 ISSB S1(일반 공시), S2(기후 공시) 기준을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적용 중
 - 정부는 국제적 정합성, 기업의 수용가능성, 정보 유용성, 주요국의 동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를 마련할 계획('26.4월 확정 예정)
 - 한편,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자율 공시는 증가 추세
 - 대부분의 상장기업은 Scope1·2를 공시하나, Scope3는 153개사(68%)에서 공시(추정값의 사용범위를 기재한 기업은 이 중 30%에 그침)
- * **Scope 1:** 기업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발생원(공장, 사업장)에서 발생한 배출량
Scope 2: 기업이 구매하여 소비한 전기와 동력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배출량
Scope 3: 가치사슬 전반의 간접 배출량(공급망, 유통 중 발생 폐기물, 구성원 출장 등)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자율공시 추이(단위 : 개)

※ 한국거래소(상장), 한국표준협회(상장+비상장)

* 단, '25 상장+비상장 통계는 '24.8~'25.7 기준



'24년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여부(상장 기준)

※ 한국거래소

② (경영) 지속가능경영이 대기업을 넘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산

- (대기업) 조직 내 지속가능경영 체계가 고도화되는 경향
 - * 500대 기업 중 ESG위원회 설치 비중(%) : ('21) 44.5 → ('23) 53.7(전자공시시스템)
- 특히, 공급망 ESG 관리는 주요한 지속가능전략으로 자리매김
 - * 자율공시기업의 97%가 공급망 ESG 관리 활동 수행, '23년 대비 7.8%↑(중기중앙회)

- EU 공급망 실사지침 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대기업은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데이터 수집, 개선 지원체계 구축

< 주요 국내 대기업 공급망 실사 대응 현황 >

기 업	주요 내용
S社	- ESG 플랫폼 구축 → 그룹사·1,200개 협력사 데이터 통합 관리
H社	-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과 협력사 3,800개사의 공급망 실사 추진

○ (중견) 지속가능경영을 도입하는 비중은 지속 증가 추세

* ESG 경영 도입 中堅 비중(%) : ('21) 25.5 → ('22) 29.3 → ('23) 34.1 → ('24) 39.3
 ↳ ①기업 이미지개선, ②지속가능성 확보, ③원청사의 ESG 경영 준수 요구 순

○ (중소) 계약·거래 시 협력사 ESG 수준을 활용하는 기업이 점차 늘어나면서 중소기업 역시 지속가능경영 필요성 증대

* 협력사 ESG 평가결과를 계약·거래 시 반영하는 기업 비중(%) : ('25) 50.4(중기중앙회)

- 이에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수준이 2년만에 2배 이상 증가

* ESG종합점수 : ('22) 미흡(2.0~2.2) → ('23) 양호(3.2~3.4) → ('24) 양호(4.6~4.8)(대한상의)

③ (투자) 의사결정 기준으로 ESG 영향력은 점차 확대

○ 공적연금의 사회적 책임 투자 급증('21 131조원 → '24 712조원)

○ 국내 ESG 채권 규모는 '25년 말 기준 254조원

- 이 중 사회적 채권*이 210조원(8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LH 등 주거복지 공기업의 서민 주거 안정, 도시재생 사업 등으로 대규모 발행



※ 각 연금 홈페이지



※ 한국거래소

Ⅲ. '21~'25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평가

1 그간의 성과

- 산업 전반의 지속가능경영 제고를 위한 K-ESG 가이드라인 개발
 - 국내외 주요 ESG 평가지표·항목* 분석을 통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면서 우리 기업이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 제시
 - * 평가기관: DJSI, MSCI, EcoVadis, Sustainalytics, 공시기준: GRI, TCFD 등
 - '23년부터 자동차 등 주요 수출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실질적인 ESG 대응 역량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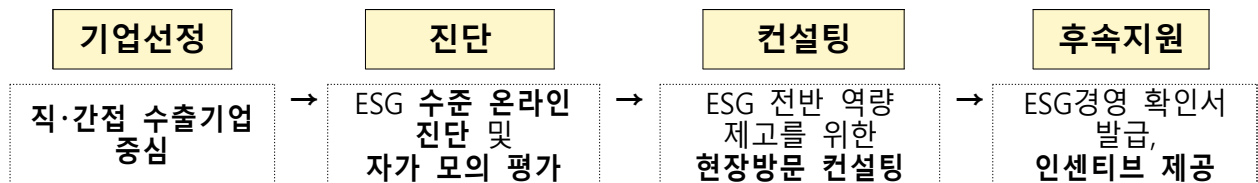
< K-ESG 가이드라인 개발 현황 >

'21		'22		'23~	
• K-ESG 가이드라인 * 4개 부문/ 61개 항목		• 공급망 대응용 K-ESG 가이드라인 * 4개 부문/ 60개 항목 6개 추가항목		• 업종별 K-ESG 가이드라인 * 7개 업종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디스플레이, 제약, 바이오, 조선)	

- 대·중·소 ESG 네트워크 포럼 개최(총 42회, 산·학·연 약 500명 참여)
 - 대·중소·중견기업 간 ESG 상호협력 방안 및 ESG 공시 의무화, EU 공급망 실사지침 등 주요 이슈 논의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특히, 수도권 기업 중심으로 이슈별 대응전략 포럼(on-off line)을 개최하고, 지역 주력 산업 중심 순회 포럼도 진행
- 지속가능경영 정보의 허브, K-ESG 온라인 플랫폼 운영
 - ESG 정책·동향, 교육 프로그램 등 약 3,400여건 정보 제공
 - 기업이 스스로 자사의 ESG 수준을 측정하고 부족한 부분의 역량 제고를 위한 K-ESG 가이드라인 기반 자가진단 시스템 구축

- 공급망 실사 지침 대비 컨설팅을 통해 ESG 규범화 적기대응 지원
 - EU, 미국 등 주요국 수출기업 및 글로벌 이니셔티브 가입기업의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여 '23년부터 年 500개사 지원
 - EU 공급망 실사지침 대상 기업과 협력사는 패키지로 우선 지원

< 지원절차 >



- 중견·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지속가능경영 교육 실시
 - 별도의 ESG 전문인력 채용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대상 사내 전문가 육성 교육을 통해 기업의 ESG 대응력 제고
 - 수도권에 국한되지 않고 지방거점 대학 교수진과 협력하는 등 전국 단위 찾아가는 지속가능경영 교육 추진

< 연도별 교육 참여실적 >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① 사내전문가 육성	27개사	26개사	248개사	305개사	350개사*
② 찾아가는 지속가능경영 교육	433명	430명	491명	495명	

* '25년부터 2개 과정을 통합 운영하고, 민간 자격증 과정 신설(2회, 50명 취득)

-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참여 확대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 지속가능경영 우수기업에 정부포상(12월, 지속가능경영시상식) 수여
 - * '25년 대통령표창 2점, 국무총리표창 2점, 장관표창 20점 등 총 24점
 - 수출 중소·중견기업 ESG 지원협의회¹⁾를 발족('21)하고, ESG 우수 기업에 대한 금융·마케팅 인센티브²⁾ 제공 협약 체결

1) 산업부, 생산성본부,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참여

2) 공급망 실사 지침 대비 컨설팅 우수기업에 동 인센티브 부여

⇒ ①K-ESG 가이드라인 마련, ②교육·컨설팅 등 지속가능경영 지원, ③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자율적인 지속가능경영 실천기업 확산' 중

□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부족



- 산업별·기업 규모별 맞춤형 지원이 부족해요.
- 여전히 컨설팅, 교육 등 역량강화 지원이 필요해요.

- 컨설팅: 획일화된 지원으로 질적 성장(단계별·심화 프로그램) 미흡
- 컨설턴트: 컨설턴트의 역량 편차가 심각*하며, ESG 경영 민간 자격증만 50개 이상으로 실무경험 없는 자칭 전문가 양산 우려
- * 現 공급망 실사 컨설팅 前 컨설턴트 사전교육은 2일에 불과

□ 공급망 ESG 대응을 위한 협력 및 인센티브 강화 필요



- 정부가 대·중·소 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 및 인센티브 확대 노력해 주세요.
- 공급망 진단 솔루션, ESG 리포팅 툴 등을 도입하지 않고 있어요.
- * 대기업 33.9% VS 중견기업 49.4% VS 중소기업 66.7%

- 공급망 가이드라인, 공급망 실사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나, 대기업-협력사와 연계하는 실질적인 협력 확대 필요

< 공급망 실사 대비 시 기업의 주요 애로 사항 >

- △ 대: 일부만 플랫폼 구축하여 협력사 평균 역량은 여전히 낮은 편
- △ 중: 원청사가 다양할 경우 중복 입력 이슈로 업무에 차질 예상
- △ 소: 인센티브 부족으로 자발적 참여 동기 미흡

- ESG 경영 확산을 위한 매력적인 인센티브 확대 필요

□ CEO·실무진 교육의 한계



- CEO의 ESG 이해도 제고가 조직 전체 ESG 경영의 출발점입니다.
- 기업 내부 인력양성을 위한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세요.

- 기업의 ESG 경영은 CEO의 결단이 매우 중요하나 대상 교육 부재
- 대부분 수도권에 교육장소가 집중되어 지역 기업의 교육기회 부족

□ 기업 ESG 정보 접근 및 활용 지원 부족



- 해외 ESG 규제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 정부가 제공하는 지속가능경영 관리 시스템 사용 의향있어요(응답자의 71%).

- 자가진단 시스템 기능 개선 등 지속가능 시스템 고도화 필요

IV. 비전 및 정책 목표

비전

기업의 자율적 지속가능경영 확산을 통한 튼튼한 산업 기반 조성

목표

'30년까지 지속가능경영 도입 기업 5,000개사 달성



3대
전략

12대
과제

I.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확산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 ❶ 지속가능경영 맞춤형 컨설팅 체계 확대 개편
- ❷ 지속가능경영 전문인력 양성
- ❸ K-ESG 상생 벤더 발굴·매칭
- ❹ 지속가능경영 교육 강화

II. 국제표준화 및 규범화 대응 역량 강화

- ❶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표준 활동 참여 확대
- ❷ K-ESG 가이드라인 국내외 정합성 제고
- ❸ 글로벌 규범 대응력 강화
- ❹ 개도국 ESG 역량 강화 지원

III. 자율적인 지속가능경영 실천·확산 기반마련

- ❶ K-ESG 플랫폼 고도화
- ❷ K-ESG 지수 개발
- ❸ K-ESG 지수 연계 인증제도 마련
- ❹ 지속가능경영 실천문화 확산

V. 정책과제

1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1. 지속가능경영 맞춤형 컨설팅 체계 확대 개편

□ (범위) 공급망 실사 대응 중심에서 ‘기업 수요 맞춤형’으로 개편

< 공급망 실사 대응 컨설팅 사업 추진 경과 >

- △ 현황: 수출 중소·중견기업 1,500개 사('23~'25, 총 40여억원)를 지원
- △ 한계: 기업마다 시급한 현안(기초체력 확보 vs 바이어 요구 대응)이 다름에도, 공급망 실사 대응 위주의 획일적 컨설팅 제공으로 현장의 구체적·즉각적 요구 미해소

□ (방식) 참여기업의 정밀진단 + 모듈형 컨설팅 선택 방식 도입

❶ (정밀진단) 기업 자가진단 및 전문가 검증*을 통해 기업의 현재 ESG 경영 수준을 '초기-발전-선도'로 객관적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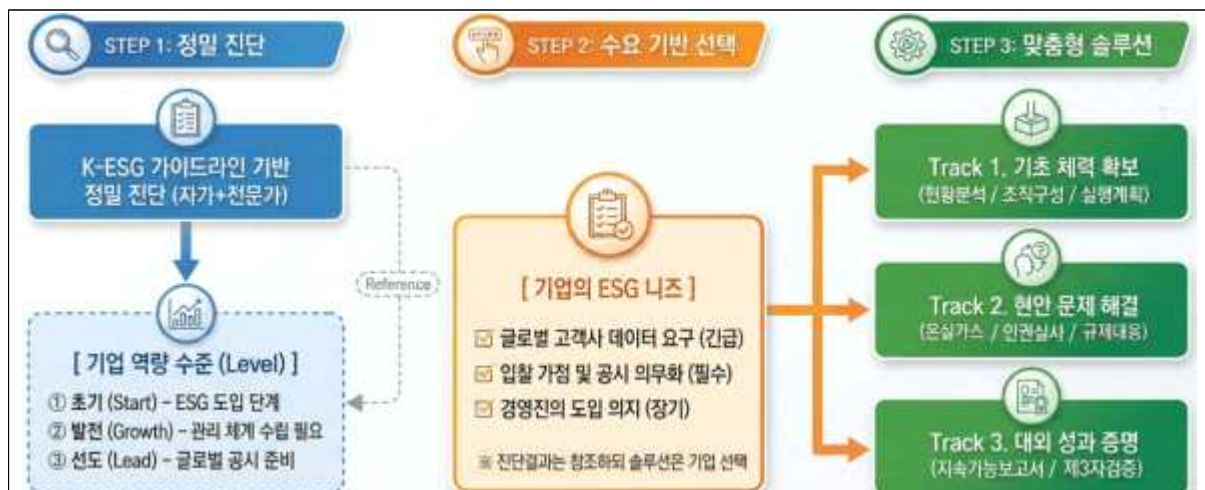
* 자가진단 실시 후 KPC 주관 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지원 기업 선정 및 분류

❷ (기업 수요파악) 진단 결과 기반 권장 트랙을 제시하되, 기업이 처한 상황(바이어 요구, 입찰 등)에 맞춰 필요한 컨설팅 모듈 선택 허용

❸ (유연한 매칭) 핵심 솔루션* 과 기업 수요 매칭(年 300개사 목표)

* Track1: 기초체력 확보, Track2: 현안 문제 해결, Track3: 대외 성과 증명

< 지속가능경영 맞춤형 컨설팅 체계 >



2. 지속가능경영 전문인력 양성

□ 국가 공인 ‘지속가능경영(ESG) 컨설턴트’ 자격제도 신설

- (개인) 실무 경력·프로젝트 실적 기준으로 차등화된 3등급(수석-전문-실무) 자격 체계를 개발(~'27)하여 컨설팅 품질 제고

< 지속가능경영 컨설턴트 자격 체계 >

등급	기대되는 직무 역할(컨설팅 책임 수준)	자격 요건(차등 기준)
1등급 (수석)	산업별ESG 로드맵 및 전략 설계, 컨설팅 모델 개발 및 사업 기획	전문 컨설턴트 자격보유 + 최소3년 이상 실무 경력 + 컨설팅 총괄 수행 최소 25회 이상
2등급 (전문)	중견/대기업ESG 실사 및 평가 수행, ESG 공시 보고서 작성 및 검토 주도, ESG 경영 시스템 구축 및 인증(ISO 등) 지원	실무 컨설턴트 자격보유 + 최소 2년 이상 실무 경력 + 컨설팅 수행 최소 15회 이상
3등급 (실무)	ESG 관련 기초 데이터 수집·분석, K-ESG 가이드라인 기반 기초 진단 및 보고서 초안 작성, 법규 및 트렌드 리서치	제한 없음 (신규 진입 가능) + 기초 필수 교육 이수 및 시험 통과

- 국가 공인 자격증화*하고, '30년까지 자격증 보유자 1,000명 양성

* 「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지속가능경영 자격제도 도입·운영근거 마련 검토

- (기관) 전문 인력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한 법인을 정부가 인증하는 「ESG 전문 컨설팅 기관」 지정 제도 신설('28~)

* 국가 공인 1등급(수석) 컨설턴트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전담 조직을 갖춘 법인

- 정부 지원사업(공급망 실사 대응사업 등) 참여 시 가점 부여

* 컨설팅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해 컨설턴트 등급별 수행 범위를 사업 공고에 명시

□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ESG 인력 부족 해소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실무를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27~, 年100명)

* 채용 설명회 개최, 기업-인력 간 매칭프로그램 운영, 직무교육 프로그램 등 기업이 ESG 경영 차원에서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게 하는 프로그램 ↴

- ESG 전담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3~7월)에 적시 운영*

* 인턴십 모집(1개월) → 교육 및 컨설팅(2개월) → 인턴-기업 매칭(3개월)

3. K-ESG 상생 벤더 발굴·매칭

□ (발굴) ESG와 기술을 겸비한 ESG 특화 벤더 발굴('26~)

- 단순 복지형 기업이 아닌, 산업 연계성과 스케일업 가능성이 높은 사회연대경제 기업 중심으로 유관기관 추천* 등을 통해 발굴

* 例)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소셜벤처스퀘어(기술보증기금) 등

※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발굴 필요성

- △ (개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을 통칭
- △ (필요성) 공급망 실사가 시작되면서, 협력사 관리가 수출 핵심요건으로 부상하나, 기존 제조·원가 중심의 벤더 체계로는 실사 등이 요구하는 ESG 충족 곤란

□ (매칭)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ESG 보완 목적 밸류체인 매칭

- 기존 벤더사(제조 중심)가 해결하기 어려운 ESG 특화 영역 중심
- 대기업의 ESG를 강화할 수 있는 전문기업(소셜벤처 등) 연결

< 매칭 예시 >

구분	매칭		효과
	대기업	ESG 벤더사	
E-Type	배터리·화학	폐자원 회수 및 재생 원료(PCR) 공급 기업	CBAM 등 대응을 위한 재생원료 의무 사용 충족
S-Type	전자·IT	장애인 표준사업장(MRO, 데이터 가공) 및 특수 청소 기업 매칭	단순 MRO를 넘어 실사 다양성 지표 개선 등

□ (환류) 실질적 상생을 뒷받침하는 제품검증·인센티브 체계 마련

- (제품검증) 대기업 생산 라인에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금형 수정, 성능 테스트 등 '초기 진입 비용' 지원 * 例)기업당 최대 5천만 원
- (인센티브) 매칭 성공 및 실제 계약 체결 시, 참여 대기업에 동반 성장지수 가점 부여 및 협력사 대상 정책금융 우대

4. 지속가능경영 임직원 교육 강화

□ CEO 대상 찾아가는 교육 개편('26~'30, 500명)

- 기존의 글로벌 규범 위주 교육에서 탈피하여 수출 확대 및 신사업 기회발굴 등 비즈니스 관점의 ESG 사례교육으로 전면 개편
 - * 예) 친환경 공정 도입으로 에너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한 기업 사례
- 바쁜 경영진의 일정을 고려하여, 26개 지역 ESG센터(상공회의소)와 연계한 ‘조찬 포럼·CEO 라운지 포럼’ 등과 찾아가는 교육 연계 추진

□ 권역별 사내 전문가 교육* 확대('26~'30, 2,500명)

- 산단공(전국 산업단지)과 협력하여 주력 산단별 주력 업종에 맞춰 현장 실무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산업·지역별 교육 추진

< 예시 - 산업·지역별 교육계획(안) >

산업	주제	대상 지역 후보
반도체 산업	공급망 실사지침, 물 사용 최적화 등	충북 청주 오창산단
자동차 산업	CBAM, LCA, 순환경제, 노동인권 등	전북 완주 테크노밸리
철강 및 소재산업	CBAM, 재생에너지 전환, 공급망 ESG 등	전남 광양 국가산단
이차전지·배터리 산업	탄소발자국, CSDDD, 순환경제 등	경북 경산 첨단소재단지

- 지속가능경영 우수기업 벤치마킹 프로그램(교육·현장방문) 신설
 - * 탄소포집설비 등 보안 부담 적고 벤치마킹 수요가 높은 시설 위주로 코스 개발

□ 대·중·소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아카데미」 운영('26~)

- 지속가능경영 역량이 앞선 대기업(원청사)이 커리큘럼과 강사를 제공하고 협력사가 참여하는 ‘공급망 특화 아카데미’를 운영
 - * 例) 교육 주관 대기업에는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 교육 운영비 일부는 정부 지원
- 대기업의 ESG 전문인력과 협력사 실무자를 1:1로 매칭하는 ‘ESG 멘토-멘티제’를 운영하여, 노하우 전수 체계를 구축

2 국제표준화 및 규범화 대응 역량 강화

1.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표준 활동 참여 확대

- 주요 ESG 표준화 기구*에 국내 전문가 참여 확대
 - ↳ ISO TC322(지속가능한 금융), TC207(환경경영), TC309(지배구조) 등
 - * ISO(국제표준화기구): 전 세계 공통 기술 표준 제정 기관(167개국 참여)
 - * TC(기술위원회): ISO 산하 기술 분야 표준 제정 조직
- 주요 표준 개정 논의에 우리나라 산업계 의견 적극 반영
 - * ISO26000(사회적책임 지침),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ISO37000(거버넌스 지침) 등
- 신규 ESG 표준에 선제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적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내 K-ESG 프레임워크를 반영한 국제표준화 전략 수립
 - * 例) 공급망 인권실사, 탄소정보 공개 표준 등
- 국가별 협력채널*을 활용하여 K-ESG의 국제화 지원
 - * 정부간 협력채널 : (美) 한미 산업협력대화, (EU) 한-EU 산업정책대화 등

2. K-ESG 가이드라인 국내외 정합성 제고

- (국내) 확정될 금융위 공시기준 연계 및 업종별 가이드라인 확대
 - 금융위 공시기준 확정 시 K-ESG 가이드라인 개정 신속 추진
 - 업종별 특화 가이드 지속 개발('26~'28, 신규 6개)
 - * 방산, 물류·유통 등 수출 비중이 높은 분야부터 개발 추진
- (국외) K-ESG 가이드라인과 해외 주요 평가·공시기관의 기준 간 비교표 및 매핑 테이블 마련·제공
 - K-ESG 69개 진단항목과 글로벌 5대 기준 매핑 테이블 구축
 - * 例) 온실가스 Scope-1 배출량 : K-ESG가이드라인 E1-1 = GRI 305-1 ...
 - K-ESG 플랫폼 내 '글로벌 기준 자동 변환' 기능 추가('27~)

3. 글로벌 규범 대응력 강화

- 주요국 규제 모니터링 강화 및 온-오프라인 정보 제공 고도화
 - 131개 KOTRA 무역관 등을 통해 주요국 동향을 수집하고, 기업에 조기 알림(SNS, 홈페이지 게시 등) 체계 마련('26~)
 - 월간 지속가능경영 리포트, 연례 백서(ESG 글로벌 동향) 발간

< 주요 모니터링 대상 규제 >

지역	주요 규제	담당 무역관
EU	CSRD, CSDDD, CBAM, 배터리 규정 등	브뤼셀, 베를린, 파리 등
미국	SEC 기후공시, 캘리포니아 공급망법 등	뉴욕, LA, 워싱턴 등
중국	ESG 공시, 녹색제조 인증 등	베이징, 상하이 등
동남아	싱가포르 ESG 공시, 베트남 환경규제 등	싱가포르, 하노이 등

- KOTRA 바우처 사업을 통해 글로벌 원청사가 요구하는 해외 인증 비용, 신청 절차·서류 작성 지원('26~, 年 300개사)

4. 개도국 ESG 역량 강화 지원

- 국내 기업 해외 공급망의 ESG 리스크 선제적 관리
 - * 지원 필요성 : EU CSDDD 등 글로벌 규범은 해외 협력사까지 실사 의무 확대
 - 개도국 ESG 표준화를 위해 K-ESG 가이드라인 보급·현지화 지원
 - 공급망 인권·환경 진단 툴 제공·국내 기업 협력사 대상 교육 추진
- 탄소 저감 지원사업 등 개도국 제조업의 ESG ODA 지원 확대
 - 원청사와 함께 ESG 공시·공급망 실사 지침 등에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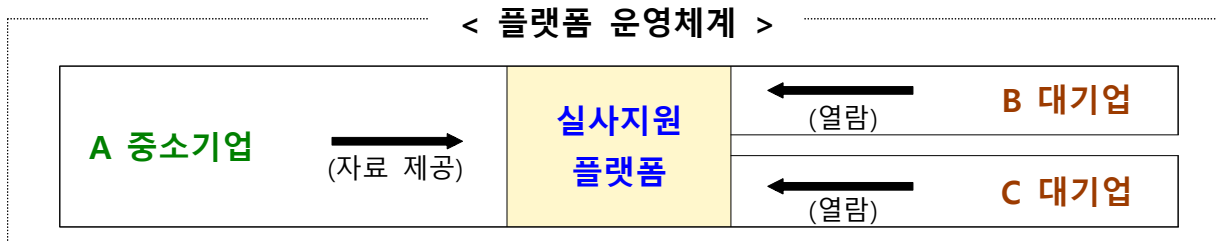
< ESG ODA 예시 >

분야	주요 규제
환경(E)	공장별 탄소배출량 측정 시범사업, 소규모 재생e 설비 도입
사회(S)	공장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등

1. K-ESG 플랫폼 고도화

□ 중소·중견기업 간편 공급망 실사 지원체계(Data Space) 구축('27~)

- * 협력사(중소·중견): 원청사마다 유사한 자료 제출에 따른 대응 부담 경감,
원청사(대기업 등): 실사 이행부담(협력업체 데이터 수집 시 상당시간 소요 등) 완화



○ 공공·대기업 DB를 연계하여 입력 효율성 제고

- * 공 공: 온실가스, 에너지, 용수, 폐기물, 산업재해 등 협력사 공공 데이터와 연동
대기업: 대기업 자체 구축한 공급망관리 시스템과 연계

○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금융·수출·인증 패스(Pass) 제도」도입

- * 금융: 플랫폼 데이터를 은행과 연동, 별도 심사 없이 금리 우대 및 보증 한도 증액
수출: 수출바우처 등 각종 수출지원사업 가점 지원
인증: 우수 대기업-협력사 간 데이터 공유 실적 등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 검토

□ AI 기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자동 작성기능 마련

- * 작성 비용 절감 : 외부 용역 3,000만원 → 플랫폼 이용 시 무료

○ ESG 경영 도입 기업의 K-ESG 가이드라인 기반 보고서 톨 제공

□ 자가진단 시스템 기능* 강화 및 DB 기능 추가

- * AI 분석으로 등급·우선 개선 과제 자동 도출, 시각화 대시보드 등 시스템 개선

○ 국내 ESG 보고서 DB(표준협회, 한국거래소 연계), ESG 실천기업 ESG 우수사례 DB(연 40개) 등 정보 아카이브 기능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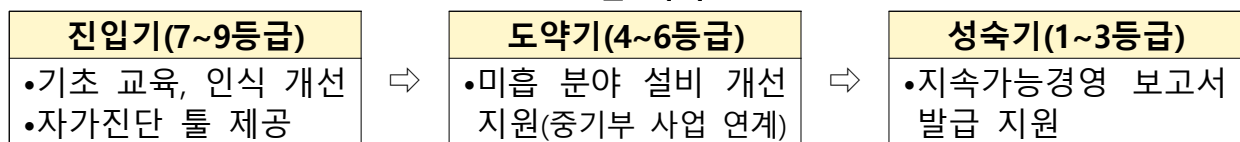
2. 한국형 지속가능경영 측정 모델(K-ESG 지수) 개발

- 기업의 ESG 경영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산업계 전반으로 비교·모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K-ESG 지수 개발 검토
 - 한국표준협회가 운영 중인 ISO26000(사회적책임) 기반 지속가능성 지수*를 ESG 활동 전체를 고려하는 다차원 지수로 개편
 - * '09년 KDI 국제정책대학원과 공동 개발, 현재 총 50개 산업(213개 기업) 측정
 - 중소·중견기업의 ESG 수준을 고려한 전용 등급제 도입
- 평가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수 활용 확대
 - * 포상, 컨설팅, 인증, 정책금융, 판로, 교육 등
 - 한국거래소 ESG 지수 등과 연계 및 투자자 정보 제공 추진

3. K-ESG 지수 연계 인증제도 마련

-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1~9단계 등급으로 정량 평가*하여 인증서를 발급하는 「K-ESG 등급 인증제」도입
 - * 자가진단(1차) → 현장 실사 및 검증(2차) → 인증위원회 심의(3차)
- 단순 평가에 그치지 않고, 하위 등급 기업이 상위 등급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수준별 맞춤형 성장 사다리’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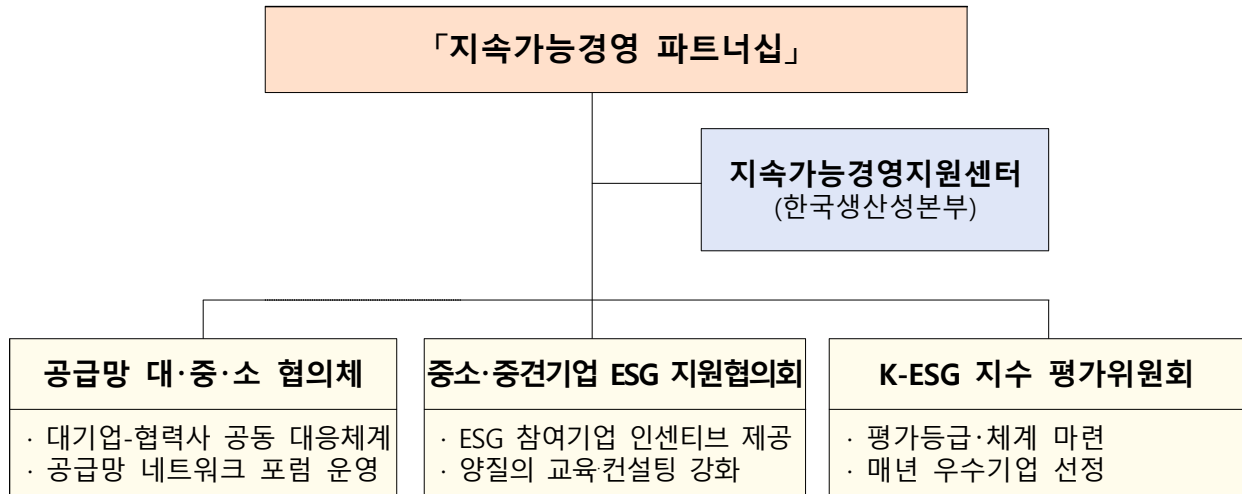


- 인증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자발적 참여 유도
 -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및 정부 지원사업 선정 시, K-ESG 인증 등급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여 공공 부문부터 ESG 확산 선도
 - K-ESG 우수등급 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브랜드 마케팅 활용 지원

4. 지속가능경영 실천문화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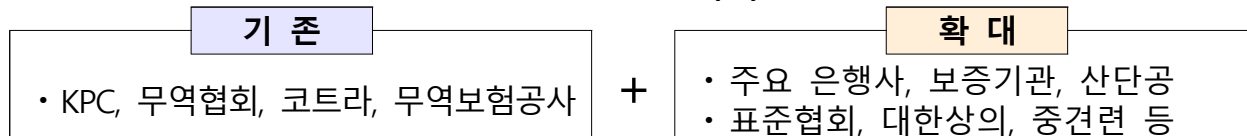
- 기업·협회·지원기관 등이 함께하는 ‘지속가능경영 파트너십’ 구축
 - 업종별 ESG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기업 중심의 자율적 ESG 생태계 조성 지원

< ‘지속가능경영 파트너십’ 체계 >



- 중소·중견기업 ESG 지원협의회 확대를 통한 기업 인센티브 강화
 - 금융 우대, 수출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 제공이 가능한 기관과의 연대를 단계적으로 확대 → 기업의 ESG 참여 유인 강화

< 지원협의회 구성(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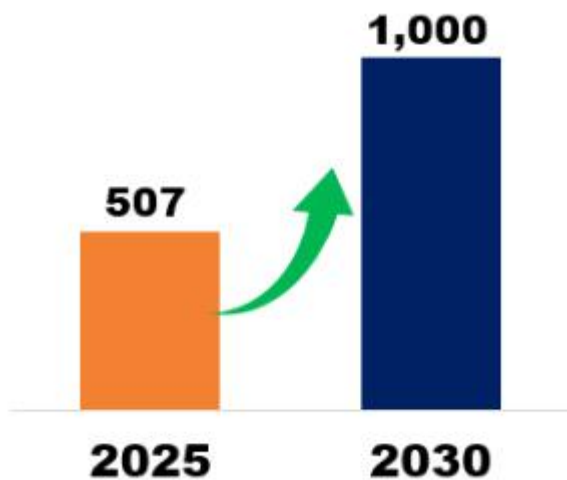


- 글로벌 트렌드 기반 지속가능경영 정책방향 연구 확대
 - 글로벌 평가기관별 공급망 필수요건, 업종 공통문항, 감점요인 등을 유형화한 맞춤형 대응 가이드 개발 등 평가·인증 분석체계 구축
- 사업 실태조사·기업 적용사례 등을 축적하여 산업별·기업 규모별 성과를 진단하고, 차년도 정책 설계에 반영하는 환류체계 구축

VI.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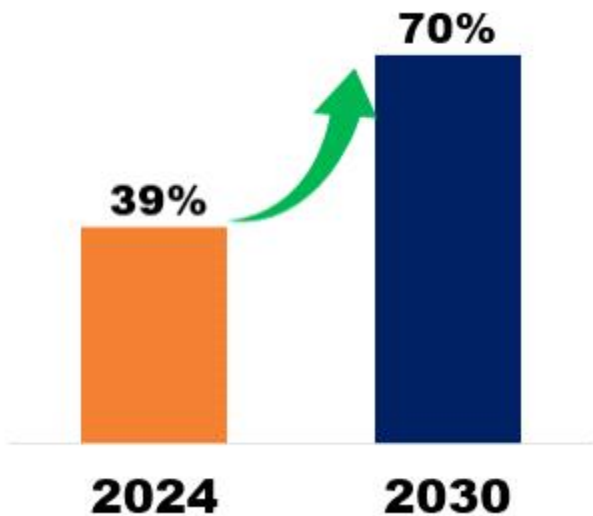
- ◆ 중소·중견기업 지속가능경영 역량 강화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 ◆ K-ESG 체계의 국내외 정합성 강화
- ◆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및 자율적 지속가능경영 실천문화 확산

〈 보고서 공시기업(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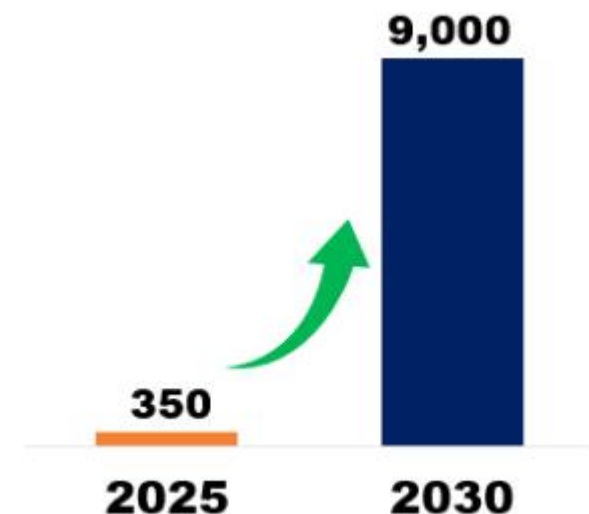
〈 중견기업 ESG 경영 도입율(%) 〉

* '24년 중견기업수 : 6,47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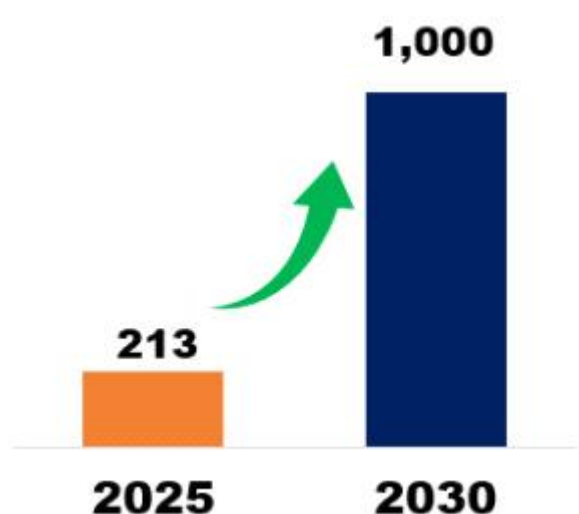


〈 지속가능경영 전문가(명, 누계) 〉

* 교육 수료, 컨설팅 자격증 보유



〈 K-ESG 지수 참여기업(개) 〉



VII. 향후 추진계획

주요 후속조치		일정
1.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 지속가능경영 맞춤형 컨설팅 체계 구축		계속
· 지속가능경영 전문인력 자격 제도 마련		'27년
·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27년
· CEO 전용 찾아가는 교육, 권역별 사내 전문가 교육 실시		계속
· 상생협력 아카데미 운영		계속
2. 국제표준화 및 규범화 대응 역량 강화		
· 주요국 ESG 규제 제·개정 동향 조기알림 체계 마련		'26년
· 업종별 가이드라인 마련		계속
·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표준 활동 참여		계속
· 개도국 K-ESG 가이드라인 보급		'27년
3. 자율적인 지속가능경영 실천·확산 기반마련		
· 공급망 ESG Data Space 구축 등 플랫폼 고도화		'27년
· K-ESG 지수 개발		'27년
· K-ESG 지수 연계 인증제도 마련		'27년
· 기업 인센티브 강화		계속

* 위 계획은 잠정안으로 향후 상황·정책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